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3132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 및 신고”를 “확인, 신고 및 변경신고”로 한다.

- ④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2.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 및 평가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 및 평가 방법”으로 한다.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를”을 “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법 제12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정부의 승인 또는 확인 등을 받은 살생물물질로서 해당 살생물제품유형으로 사용될 경우에 대한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살생물물질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자료(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라 한다)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만으로는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

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4. 국내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26조 중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를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장비를 각 1대 이상”을 “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장비와 분석기기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분야”를 “분야에서 3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분야”를 “분야에서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과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 분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험·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제3호”를 “법 제45조제5호”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 제9호의3,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변경신고,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 9의2.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 9의3.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확인에 관한 업무
13. 법 제51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
14.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3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 가. 명칭, 성분, 함량
 - 나. 사용 용도, 용법·용량, 효과·효능
 - 다. 유해성·위해성 정보
 - 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보망 구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정보

- ③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2. 화학물질 함유제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명칭

나. 유해성·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다.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제품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

제5장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포상금)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6호의2, 제7호의2, 제18호의2, 제19호의2,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6항·제7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의3.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고시

1의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물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6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7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고시

18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19의2.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의 신고 접수

19의3. 법 제60조제1항제3호·제4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8조제1항제2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시험방법”을 “시험 및 평가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의2, 제22호의3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2의3.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에 관한 기준의 고시

24.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변경지정·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11.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의3.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4.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 다만,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45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다만, 제3항제2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7.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 사실 통보의 접수

8. 법 제52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제39조제2항 중 “확보”를 “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로 한정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물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나. 제35조제2호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위한 기술적 지원

다. 제35조제4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시 자료 작성 지원

제6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2.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

② 법 제54조의2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및 선임 받은 업무

2.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그 밖에 살생물제의 명칭, 용도, 유해성·위해성 정보 등 살생물제에 관한 정보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승인유예기간란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승인유예기간란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승인유예기간란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8년”을 “2027

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승인유예기간란 중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 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300	500	1,000
나.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300	500	1,000
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300	500	1,000
라. 법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법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법 제60조제1항제4호	300	500	1,000
마. 법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5호	600	800	1,000
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6호	600	800	1,000

사.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7호	600	800	1,000
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8호	600	800	1000
자.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9호	600	800	1000
차.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0호	600	800	1,000
카.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1호	300	500	1,000
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2호	300	500	1,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살생물처리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에 관한 자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개정이유

연구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승인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호,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과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제1조의2 신설)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생활화학제품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정함.

나.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25조의2 신설)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사람·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만으로는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척추동물시험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7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위임사항의 확대(제38조제1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마.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범위(제39조의2 신설)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는 자 등의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는 자 등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의 업무에 살생물물질의 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자료의 개별 제출 등의 업무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32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를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취